

[종합·해설]

■ 결렬 예상됐던 남북장관급회담

“쌀 달라” “先軍정치” 北 선전장 전략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처음으로 남북이 얼굴을 맞댄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아무런 성과없이 사실상 결렬된 것은 이번 회담에 임한 남북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회담이 열리기 전부터 정부는 아무 합의 없이 회담이 끝나는 상황을 배제하지는 않았을 정도로 뜻밖의 상황은 아니지만 회담 일정은 다 채우지 못하고 하루 앞당겨 종결될 지는 이날 아침까지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양측의 경교하며 6자회담 복귀에 평행선을 달렸다는 의미다.

양측의 입장 차이는 회담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지난 12일 기초발언에서부터 극명하게 드러났다.

무엇을 얘기할 지에 대해서부터 완전히 엇갈렸다. 남측 수석대표인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기초발언의 대부분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강한 유감과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데 할애했다.

하지만 북측 대표단장인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는 기초발언에서 미사일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그동안 제기했던 국가보안법 철폐 등 이른바 '3대 장벽'을 제거할 것을 되풀이하고 쌀 50만t 차관과 경공업 원자재 제공을 요구하는 한편 북한의 선군(先軍) 정치가 남한의 주민들을 살린다는 엉뚱한 주장을 펴 남측 대표단을 당혹스럽게 했다.

남측 대표단은 이후 토론 과정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가져온 국제 정세의 불안과 추가 발사시 파장을 경고하며 6자회담 복귀를 위한 설득 작업을 폈지만 북측의 반응은 냉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대표단은 미사일 발사를 정상적인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규정할 지난 6일 외무성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이 결렬된 가운데 북한 대표단이 13일 오후 당초 일정 보다 하루 빨리 부산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귀국길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미사일 발사 책임 추궁에 '사오정 답변' 일관

차기 일정도 못잡아... 남북관계 경색 불가피

대변인 발표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면 논의의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6자회담 복귀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기서 논할 문제가 아니다"고 협의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이 추가 논의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회담을 하루 앞당겨 끝낸 데는 쌀 차관 제공 문제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측은 수석대표 접촉 등에서 쌀 50만t 차

관 제공에 대해 강한 집착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이미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탈출구를 찾은 때까지 이를 유보하기로 결정한 만큼 협상의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 쌀 차관 제공과 관련한 양보를 얻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 더 이상의 논의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고 남측도 쌀에만 관심이 있는 북측을 더

붙들어 뚫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남북장관급회담 결렬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차기 회담 날짜를 잡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기도 힘들어지면서 경색 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한편 13일 남북장관급 회담 북측대변인 권호웅 내각장사의 '선군정치' 발언과 관련,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공공요금안정 정책간담회에서 "권호웅 대변인이 상식이하의 발언을 했다"며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황당하고 정부와 국민을 모욕하는 발언"이라며 발언 취소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한나라 "이종석 장관 사퇴해야"

한나라당 이계천 대변인은 13일 부산에서 열린 남북장관급회담이 결렬된 데 대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항의 의지도 없이 시작했던 회담은 처음부터 예견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 정부는 미사일에 당하고, 회담에서 '선군정치' 발언으로 또 당했다. 우리 국민의 자존심은 망가질대로 망가져 만신창이가 돼 버렸다"며 "노무현 대통령과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회담 결렬의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하며, 이 장관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北 미사일’ 설득서 제재로

UN안보리 표결로 갈 듯

베이징(北京)에서 중국의 북한 설득 상황을 지켜보던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13일 사실상의 '설득 실패'를 선언함에 따라 북한 미사일 문제가 다시 유엔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는 국제사회가 북한을 설득해 6자회담에 복귀시키도록 사태를 원만히 수습하려던 중국의 노력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결의안 표결을 통한 제재에 나서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야기된 일련의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고 북한으로서는 최대 우방이자 원조자인 중국으로부터도 신뢰를 잃을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이와 관련 중국은 12일 러시아와 손잡고 별도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담시킴에 따라 중국과 결의안과 유엔 헌장 제7장을 인용한 일본과 결의안이 세(勢) 대결을 벌이게 됐다.

그동안 중국은 북한을 지나치게 감싸고 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을 보내 담판을 벌이는 등 다각도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힐 차관보도 높이 평가했지만 국제사회가 기다린 것은 중국의 노력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북한의 응답이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힐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으로 돌아가기에 앞서 "평양에서 아무런 북과도 마련하지 못했다"고 말해 북한에 대한 설득이 실패했음을 선언했다.

그의 이런 발언은 일본이 제출한 안보리 결의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대북 제재 결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힐 차관보는 그러나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골 리자오싱(李肇星)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다음 단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려는 협상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라이스 장관과 리 부장은 이날 하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만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러시아와 공동으로 제재 수위를 낮춘 대북 결의안을 만들어 배포함으로써 표결을 통한 유엔의 북한 제재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러 결의안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북한 당국에 대해 미사일 발사실험 유예(모라토리엄)를 다시 선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이명박 단초제공... 박근혜 사려깊지 못해”

이회창 '대리전 논란' 박·李 비판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13일 한나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대권주자 대리전 논란'과 관련, 당사자 격인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 전 총재는 이날 프레젠테이션에서 열린 합법포럼 주최 특강에서 전대 결과에 대해 "결과적으로 지도부 구성이 소위 민중당이나 영남출신 일색이라는 게 조금 안타깝다"면서 "과거에는 의도하지 않아도 적절하

게 진보와 보수가 섞인 지도부가 나왔지만 이번에는 그게 잘 작동이 안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명박 전 시장에 대해서 "처음에 개혁적 인물 운운하면서 특권인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 단초가 됐다. 신중치 못한 행동이었다"고 언급해 이 전 시장측에 비판의 무게를 더 두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그러나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서도 "측근들이 이에 대응하

고 못했기 때문에 대외장에서 이제 오 후보가 연설하는 듯한 자리를 옮겨 연설을 방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은 사려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비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군과거사위 진상조사 결과 발표

1968년 4월 북과 공작을 목적으로 창설된 실미도부대(공군 2325부대 소속 209 과견대)에서 4명의 공작원이 적법한 절차없이 부대내 상부의 지시에 따라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980년 대 초 운동권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은 정권안보를 위해 5공 정권 차원에서 저지른 인권유린 행위라는 판단이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과거사위)가 13일 발표할 실미도 사건, 강제징집, 녹화사업 등 진상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실미도 부대 =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68년 4월 1일 부대가 창설된 뒤 3개월간 같은 해 7월 고된 훈련 등으로 탈영을 시도한 이부영, 신

실 미도 부대원 특수범·군인아닌 민간인

강제징집 전두환 녹화 사업 지시문서 확인

현준재 등 2명의 공작원이 몽둥이 등을 동원한 구타로, 1970년 8월에는 부대 기간병에게 반발 등 '하극상'을 했다는 이유로 윤대산씨가 역시 실미도부대장 및 교육대장의 지시를 받은 동료 공작원들에 의해 각각 살해됐다.

과거사위는 실미도부대의 창설 배경에 대해 "북한의 1·21사태(무장공비 청와대 습격사도)에 대한 대응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중앙정보부가 주도적으로 창설했으며 공

군은 이에 적극 협조, 부대 관리 책임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총 31명의 공작원들은 사형이나 중형 등을 받은 특수범이나 현역군인이 아닌 민간인들이었으며 모집관들은 ▲훈련 후 장교임관 ▲임무수행 후 원하는 곳 배속 등 당초부터 지키지 못할 약속을 제시하고 이들을 모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징집 및 녹화사업 = 전두환 전 대통령

이 강제징집을 지시 승인했다는 사실이 관련 문서에서 드러났다. 5공 정권은 1980년 9월부터 1984년 11월까지 학생운동에 참여했다가 제적·정학·휴학 등 특수학적 변동자와 운동권 출신 정상 입대자, 민간인 등 1천152명을 강제징집했다. 이 가운데 921명은 사상개조 및 학원 프락치로 이용할 목적으로 실시된 녹화사업에 참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강제징집은 80년 77명, 81년 230명, 82년 371명, 83년 461명으로 계속 늘다가 84년에는 13명으로 급감했다. 서울대가 254명으로 가장 많고 고려대 165명, 성균관대 105명, 경북대 37명, 전남대 29명, 강원대 28명이었다.

강제징집자 가운데 녹화사업에 동원된 인원은 서울대 199명, 고려대 137명, 성균관대 79명, 경북대 30명, 강원대 24명, 전남대 15명 등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태진아' (Taejin-ah) featuring a photo of the singer and promotional text for a performance on July 20 and 21. The ad includes the slogan '매일밤 8시부터 쏘! 쏘! 쏘! 애들은가라!!' and '부킹천국 100%' (Booking Heaven 100%). It also lists contact information for '광주상무나이트' (Gwangju Sangmu Night) at Lotte Mart.

Small advertisement titled '산행안내' (Hiking Guide) listing various hiking group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The groups include Daegu, Gyeongju, and other regional hiking clubs.